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5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세 무 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세무과장

『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☐ 먼저,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,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☐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2023년 12월 29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4항 납부지연가산세(舊 증가산금)가 면제되는 체납액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
-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기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(안 제5조)

☐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
- 2024년 5월 23일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☐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5. .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세무과장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 상향(안 제5조)
 - 30만원 미만 → 45만원 미만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지방세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4. 11. ~ 2024. 5. 2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 을 “45만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 30조제1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,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	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45만원</u>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□ 지방세기본법
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9859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①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,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“과소납부”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“초과환급”이라 한다)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, 과소납부분(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(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,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(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) ×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2. 초과환급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

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) ×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3.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100분의 3

4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

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② ~ ③ (생략)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(생략)